

김유향 5급헌법 진모 수정사항(12.28.)

- 진모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시험공부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신적,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‘5급공채·국립외교원·지역인재’ 및 ‘입법고시’ 대비 헌법 문제는 이번 진모문제와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니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틀린 지문을 반복학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!!!

[제4회]

문14. ①지문 정답 (×)로 수정.

- 위 지문은 판례변경 전 기출문제인데, 그 후 판례변경으로 정답 수정 요함
- ① (×)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편으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,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받게 되며,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 미흡하다. ...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. (2018. 12. 27. 2015헌바77 등)

[제8회]

문1. ①지문 정답 (○)로 수정.

- 위 지문은 판례변경 전 기출문제인데, 그 후 판례변경으로 정답 수정 요함
- ① (○)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,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.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,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,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. (2020. 4. 23. 2017헌마479)